

도, 정읍 '발전동력 확보' 불어넣는다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정읍시

정읍시와 산림복지·첨단산업·출산인프라 협력
서부권 출산 환경 개선·아동 놀 권리 보장 앞장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읍시와 협력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나간다.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시·군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정읍시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방문' 행사를 열고 정읍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부터 첨단산업 육성, 출산 인프라 구축까지 정읍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사업들이 다뤄졌다.

도와 정읍시가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은 민생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내장산 문화관광 내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직접 대자연에 참여할 7개 테마 놀이공간으로, 도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부권 출산 인프라 공백을 메울 공공산후조리원도 순항 중이다. 정읍 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월 본격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전주와 군산에만 있어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부권 산모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컸던 만큼 건립에 기대가 크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시설 유치도 탄력받고 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 단지에 추진 중인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용 우주비행체 연구시설은 총

2,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에 포함하며,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정읍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해법을 찾아내고 있다. 정읍 북면 북흥리 일원에 들어서는 국립숲체원은 전북 최초의 산림복지 거점시설로 지역 내 산림치유·휴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

이동객 접근의 어려움에 따라 정읍시는 연장 1.72km, 폭 8m 규모의 2차선 국비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에 포함하며,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을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려는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읍시는 국가특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등 특화 인프라를 갖춰 차세대 동물의약품 개발의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역

에 선정됐다.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50억원이 투입되며,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독성시험 간소화 등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도는 180km 규모의 입주 공간을 확보한 정읍시를 특구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청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수성동에 위치한 정읍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해 따뜻한 복지 행보를 이어갔다.

시설을 둘러본 김 지사는 고립 위기 세대 등 10여 명과 함께 식물 화분 심기와 꾸미기 등 치유(힐링) 원예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일선에서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시·군 방문 일환으로 20일 정읍시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읍시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연 뒤, 이학수 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시민 주권시대 열어가는데 남원시장” |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출사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남원시장 출마를 밝혔다.

양충모 씨는 출마 선언에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위한 경제시장,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가는데 남원시장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남원은 인구위기, 재정 위기, 행정위기 등 3중 위기로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각의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원은 정치를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를 잘 이는 시장이



필요하며, 자신은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국가경제정책

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남원은 역사와 문화 관광, 농생명 산업자원, 지리성과 섬진강을 품어 안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경제자원으로 바꾸는 노력이나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기술과 농업, 관광과 지역산업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발전 방향은 실행가능성, 재정 책임성, 시민 참여행정이라는 3가지의 기준 아래 설계해야 한다고, 말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시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 조성” |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군수 도전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완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행정부지사는 20일 완주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완주만을 바라보고 완주군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임 전 행정부지사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현재 완주가 처한 가장 큰 문제로 “완주가 나아갈 분명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완주는 전주의 배후 도시로 머무는 것이지, 아니면 자립 기반을 갖춘 강소도시로 도약할 것인지 종대할 기로에 서 있다”며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와 송전탑 건설 등 주요 현안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줘야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민주권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기



술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완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꿰뚫는 실천형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그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31년에 걸친 중앙·지방 행정 경험을 꼽았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핵심 부처에서 국가 재정과 정책을 다뤘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으로서 K-방역의 기틀을 다졌으며,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재임 시절에는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

막, 아직까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해 완주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임 전 부지사는 비전 실현을 위한 7대 약속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지를 활용한 ‘군민 에너지 수익 배당’ △피자점 AI·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2만 개 창출 △24시간 긴급돌봄과 융합형 원스톱 돌봄센터 구축으로 ‘인심돌봄 백년도시 완주’ 구현 △지역 교육계와 상생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 △생활인프라 혁신과 30분 교통 생활권 완성 △10만 원주 위상을 걸맞은 완주 뚝 확보와 속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없는 완주 실현 등이다.

한편, 임 전 행정부지사는 오는 1월 31일 완주호토틀레문화회관에서 저서 ‘임상규의 오직 완주’ 출판기념회를 열고 군민들과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만호기자·완주=염재복기자

도내 진보 야권 김 총리

K-국정설명회 비판 잇따라

혁신당 “정치 쇼에 불과”

진보당 “맹탕 설명회”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른바 ‘K-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설명회는 총리의 국정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라기보다 개인 홍보에 치우친 행사였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역 언론의 비판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당은 이번 행사가 청년회의소(IC) 주최 형식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당은 “IC는 정치인 배출로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 국무총리가 특정 조직의 플랫폼을 활용해 국정을 설명하는 것은 공적 직위를 사적 정치 행보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과거 IC 활동 이력이 있는 김 총리가 해당 조직을 무대로 대중적 노출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도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북 방문 국정 설명회를 두고 “전북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맹탕 설명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인 강희희 전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을 조건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자치권 확대를 약속받고 있는 반면, 전북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가 전북의 미래에 대해 ‘더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웃 지역은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는데, 전북에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또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도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새만금 희망고문 이제 그만”

박정희 도의원, 군산·김제·부안 행정통합 제안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회이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해법으로 군산·김제·부안 행정 통합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희 도의원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이 수십 년째 희망고문에 머물러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국가전략과 지방분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산·김제·부안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은 서해안과 새만금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로, 새만금이라는 미래가치를 함께 품고 있는 지역”이라며 “통합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개발이 환경문제, 관광질서 등 정부 재정부자 미비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질책한 사

실을 언급하며,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로 △환경 갈등 △관할권 분정 △정부 재정부자 부채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3개 자치단체 행정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군산·김제·부안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북도는 조정 권한은 있으나 결정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 갈등과 환경 갈등에 기계적인 중립만을 고수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이 더욱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통합을 통해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환경문제와 관광질서, 정부 재정부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 이후 발전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군산은 산업단지 중심 도시 김제는 통합시청과 행정타운, 부안은 문화·관광 중심 지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시청은 새만금 개발 국가사업, 재정 전략 등 규모와 힘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각 지역별 행정센터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복지·민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희 도의원은 “지금은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할 때’”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전북과 군산·김제·부안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한 청년 정치인의 6·3 지방선거 전주시의원 도전

“우아·호성동 자긍심 되살릴 것”

‘10년 정치 수행’ 신동이스

젊은 청년 정치인 신동이스(39)씨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우아·2동·호성동)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지역 행보에 나섰다.

1986년생인 신 씨는 순창 인근 세물마을이 아버지의 고향이자 자신의 본적지로 경기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전주 우아동으로 이주한 후 전주에 뿌리를 내렸다. 전주 동중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거쳐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주에서 청년기를 보내며 전주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20대 후반 청년기부터 10년 넘게 정동영 국회의원과의 인연을 맺고 사업을 병행하며 지역구 청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지역 정치를 두루 경험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통일부장관이 된 후 주무관으로 발령받아 지근거리에서 정동영 장관을 보좌하며 정부 감각을 충분히 익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까지 통일부에서 장관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고향 전주로 돌아왔다.

신 씨는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동중학교에 처음 전학 왔을 당시 우아동과 호성동은 깨끗하고 잘사는 동네라는 자긍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나후된 이미지가 강해졌다. ‘며’ ‘제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자신이 살아온 동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일을 꼭 하고 싶었다’며 진솔한 마음을 전했다.

신 씨는 우아동과 호성동 지역 발전 전략으로 ‘관광과 생활경제의 결합’을 강조했다. 전주역 이용객이 연간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점과 아중호수, 한옥마을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꼽으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역 첫마중길 경관 개선, 겨울철 트리 설치를 통한 체류형 소비



유도 같은 소규모 정책부터 이중호수 음악분수, 포장마차형 문화거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 구상까지 설명했다.

청년·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다자녀 가구의 높은 대출 이자를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정책, 청년 주거 인센티브 확대, 젊은 신혼부부 출산 지원책 등을 제안하며 청년층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보였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 실현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아동과 호성동 지역 내 파크골프장과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그는 “우아·호성동 주민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동이스 씨는 마지막으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뒤편이 오히려 가장 낙후돼 있었다. 관광, 주거, 미래산업이 어우러진 전주의 새로운 확장 축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우아·호성동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